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건의문

존경하는 산업자원부 장관<건설교통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3당(새천년민주당 대표,
한나라당 대표, 자유민주연합 총재)>님께

국정에 다망하심에도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제의 자율 성장기반 확충은 물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우리 150만 충청도민들은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금년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첫해로서 복한의 핵문제를 포함하여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비롯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국가적 과제의 초석을 다지고 국민 대통합 속에 새로운 국가 성장 원동력을 마련함으로써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중차대한 역사적 소명 앞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 반년이 지난 지금 국가균형발전의 장래를 좌우할 수도권 규제완화를 서두르는 몇 차례의 보도를 보면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50만 충청도민과 함께 지역현실을 무시한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어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신정부의 12대 국정개혁과제중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리는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는 출범 전부터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먼저 수립한 후에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최근에는 수도권 지역에 일부 대기기업의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등 실제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방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것은 물론이고 국토개발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여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발목을 잡는 것임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부의 일관성 없고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정책 사례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국가발전에도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므로 정부는 「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하루속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나간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의 정책방향의 상호모순으로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강화시키는 정책 역효과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어 가뜩이나 심각한 지방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의 역효과를 없애기 위하여 그동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비수도권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 해 왔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의사를 누차에 걸쳐 정부에 전달한바 있으나 대책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우리 충청도민들을 비롯한 비수도권 국민의 뜻과는 전면 배치되는 처사로서 마땅히 철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하여는 국가의 장래를 위한 계획성 있고 참신한 지방산업 육성정책의 기틀이 마련된 후에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금후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정책도 수용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강력히 촉구·건의하는 바입니다

2003년 8월 일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